

OPINION

금융산업실

2026년 증권산업 주요 이슈*

2025년 증권업은 하반기 주가 상승과 투자심리 개선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운영업수익은 위탁매매, 자기매매, IB, 상품판매 및 자산관리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26년에는 높은 투자심리,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 생산적 금융 정책 등이 증권업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슈로는 생산적 금융 정책에 따른 모험자본 투자 및 중개 기능의 확대, 위탁매매 자금 유입 국면에서의 서비스 질 제고, AI의 적극적 도입 및 활용 전략 수립, 개인정보보호 인식 전환 필요성,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개선 등을 제시한다. 2026년 실적과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직면한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2025년 증권업은 하반기 주가 상승과 투자심리 개선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2026년에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과 생산적 금융 정책 기조 속에서 실적 성장과 함께 모험자본의 공급과 중개 기능 강화가 기대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고에서는 증권업 부문별 전망과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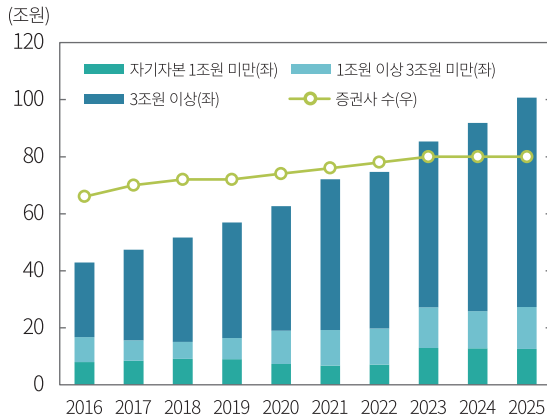
대형화와 수익성

2025년 증권업 자기자본은 전년 대비 9.8조원 증가했으며, 이 중 대형사가 7.4조원을 차지하며 자본 확충을 주도했다. 2026년에도 중대형 증권사의 신규 업무 진출을 위한 자본 확충이 이어지면서 중대형사와 소형사 간 자본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대형화 흐름은 규모의 경제와 자본규제, 그리고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IMA 등의 업무 진출에 따른 수익 다변화의 이점으로 인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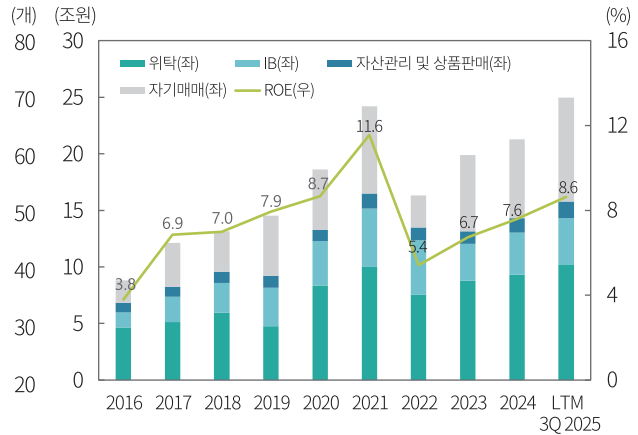
2025년 증권업 ROE는 8.6%(3분기 기준 직전 12개월)로 전년 대비 1.0%p 상승했다. 운영업수익은 자기매매, IB, 상품판매 및 자산관리, 위탁매매 등 전 부문에서 성장했다. 2026년에도 투자심리 개선, 첨단산업 성장, 생산적 금융 및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ROE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그림 1〉 증권사 수 및 규모별 자기자본 추이



〈그림 2〉 증권업 부문별 순영업수익과 RO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원내자료

부문별 실적과 전망

2025년 위탁매매 부문은 하반기 국내 주가 상승과 미국 주식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수익이 개선되었다. 개인투자자의 활동계좌 수가 전년 대비 11.9% 증가하며 투자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식 거래는 연초 부진 이후 2분기부터 회복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였다. 2026년에는 국내 기업 실적과 투자심리 개선, 외국인 순매수 기조로 국내 주식 위탁매매가 확대될 전망이다.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ELS·DLS 발행 잔액이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규제 강화에도 소폭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금전신탁은 퇴직연금 수요 증가로 크게 확대되었고, CMA는 증시 대기자금 유입으로 증가했다. 2026년에는 증권사의 온라인 판매 확대와 은행 거점 점포 판매 여부에 따라 ELS·DLS 수요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DC형/IRP 중심의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의 전환이 증권사 퇴직연금(금전신탁)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자기매매 수익은 2025년 9.1조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상반기 채권 평가이익과 하반기 주식 평가이익이 주요 요인이었다. 2026년에도 주가 상승이 자기매매 수익을 견인할 전망이나, 국내 금리 불확실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보인다.

2025년 IPO 시장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고, 회사채 발행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에는 투자심리 개선과 대형주 상장 대기 물량 등을 바탕으로 IPO의 성장이 예상되며, 회사채는 대규모 차환 발행 수요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는 인수금융 정체로 증가율이 둔화했으나, 2026년에는 인수금융 시장 회복과 증권사의 자기자본 확대에 따른 영업 강화 등으로 기업신용공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1: 생산적 금융 정책과 영향

최근 자본시장과 관련한 생산적 금융 정책은 증권업의 역할을 혁신 성장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중개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확장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모험자본 공급 기반은 지난해 종투사 2개사의 IMA 지정과 3개사의 발행어음 인가로 확대되었다. 모험자본 공급 의무 비율은 2026년 10%에서 2028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부동산 운용 한도는 30%에서 10%로 축소된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발행 증권, A등급 이하 회사채, 신·기보 보증 P-CBO, VC 및 정책펀드 출자지분뿐 아니라,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 BDC 투자까지 모험자본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증권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역시 크게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IMA 및 발행어음 자금이 중소·중견·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동시에 모험자본의 중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BDC는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형 공모펀드로, 시장에서 개인도 모험자본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증권사는 BDC의 운용 주체는 아니지만 구조 설계, 상장, 유통 과정에서 자문과 중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토큰증권의 제도화, 복수 전자등록기관 도입,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 비상장기업 지분 거래 및 유통을 위한 시장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과 현재 준비 중인 증기특화 증권사 제도 개선 역시, 증권사의 중소 벤처기업의 발굴과 투자 중개, 이들에 대한 상장 전후 기업금융 기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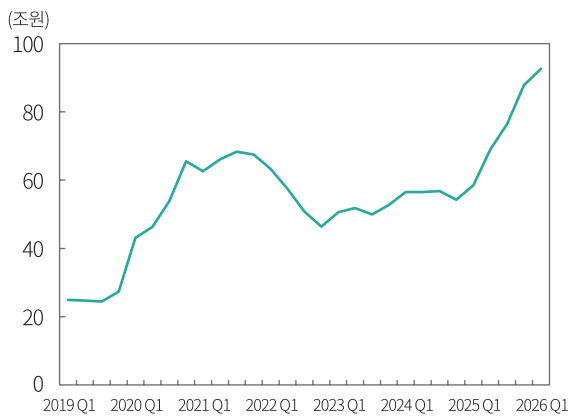
이러한 생산적 금융 정책은 증권업 전반에 걸쳐 모험자본 중심의 기업금융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IMA와 발행어음을 기반으로 한 모험자본의 투자, 비상장기업 지분 중개 서비스의 확대, 신성장섹터 특화 및 전문화가 기대된다.

정책 효과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증권사 차원의 과제도 중요하다. 증권사들은 무엇보다 모험자본 생태계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스타트업 및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을 다양한 자금 공급원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기업금융 자문과 자기자본 활용을 연계하는 머천트 बैं킹 모델로 전환하여 선제적 투자 기반의 장기 고객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 솔루션 제공과 VC 세컨더리 중개, 기업회생 자문 등 기업금융 전반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이슈2: 위탁매매 자금유입 확대 국면에서의 대응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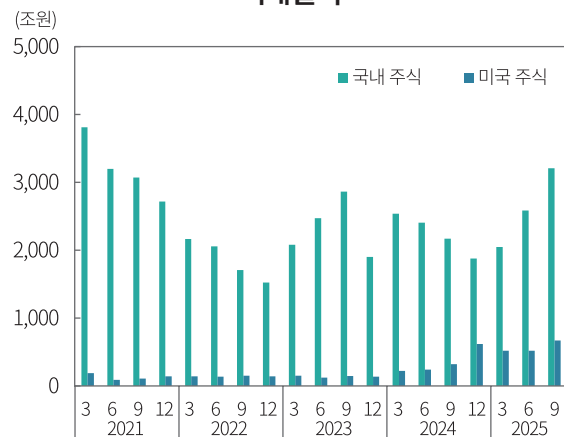
국내 증권사는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단기적인 이벤트나 수수료 경쟁에 치중하기보다 위탁매매서비스의 질을 전략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¹⁾ 실제로 투자자 예탁금은 2025년 초부터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 1월말 기준으로 약 100조 원에 달한다. 향후 국내와 미국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이러한 자금 유입 추세는 위탁매매 실적이 추가로 확대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림 3〉 투자자 예탁금



자료: 금융투자협회

〈그림 4〉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분기별 위탁매매 거래실적



자료: 금융감독원

이와 같은 국면에서 증권사는 단순한 고객 유치 이벤트보다는 주식거래 플랫폼과 투자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는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MTS의 편의성 제고, 국내주식 복귀계좌의 활용 극대화, 그리고 AI를 활용한 투자정보 제공 강화 등을 통해 투자자의 거래 경험과 의사결정 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위탁매매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슈3: AI의 활용, 기대에서 현실로

해외 증권업에서는 AI를 전사적으로 일시에 도입하기보다는, 기술 성숙도와 ROI가 비교적 명확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이 일반화되고 있다.²⁾ 초기에는 리서치 보조, 내부 업무 자동화,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등 보조적·내부효율화 중심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 성과와 안정성이 검증된 이후 점진적으로 고객 서비스, 의사결정 지원 등 전사적·능동적 AI 활용으로 확장하는 점

1) 이성복·정수민, 2025, 『국내 증권사의 위탁매매서비스 경쟁 양상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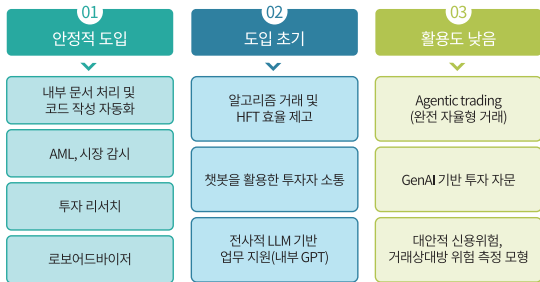
2) 김진영·노성호, 2026, 『특허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금융투자업의 AI 활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연구보고서 26-03.

근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단계적 도입 전략은 AI 도입에 따른 운영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조직 내 수용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AI 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등 규제 환경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AI 활용을 제약하기보다는 오히려 책임 있는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용화 전환을 촉진하는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 국내 증권사 역시 이러한 규제 변화를 단순한 제약 요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해외에서 이미 안정적으로 도입된 분야를 중심으로 성능 평가와 적용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의 상용화가 본격화될수록,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AI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데이터 관리, 모델 검증, 책임 소재, 내부 통제 기준 등을 포괄하는 거버넌스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AI 활용 확대는 오히려 신뢰 훼손과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증권업 사례는 AI 도입의 속도보다도, 단계적 확장과 통제 가능한 활용을 전제로 한 전략적 접근이 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5〉 해외 금융투자업 AI 도입 단계별 분류



자료: 김진영·노성호(2026)

〈그림 6〉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 금융위원회(2025. 12. 22)

이슈4: 개인정보보호, 준법을 넘어 경영 요소로 인식해야

2025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정보침해사고는 2,383건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³⁾ 통신·유통·플랫폼·카드사 등 다양한 업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업권을 불문하고 상존하며, 정보보호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편화는 우리의 생활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킹 공격의 자동화 또한 촉진하는 양면적 효과를 낳고 있다. 증권업은 비대면 채널 중심 영업 구조와 AI 기반 서비스의 본격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데이터 연계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정보관리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5년 사이버 위협 하반기 동향 및 26년 전망』.

증가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2025년 10월 발표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상장사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업은 자율 공시 대상으로, 2025년에는 6개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하였으나, 향후에는 상장된 중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정보보호 공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을 대체하는 디지털금융안전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증권업 전반의 보안 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보보호를 단순한 준법사항이 아닌, 경영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접근하는데 있다. 증권업은 디지털·실시간 거래 구조로 인해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단기적인 영업 차질을 넘어 고객 신뢰 훼손과 시장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증권사는 정보보호 인증(ISMS, ISMS-P) 획득과 정보보호 공시 등 자율적인 방식으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기관별로 대응 수준에 차이를 보여왔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와 디지털 환경변화 속에서 경쟁력의 차이로 드러날 수 있다. 정보보호 역량은 디지털 서비스의 품질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요소로서, 고객이 증권사를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업계는 정보보호를 비용이나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경영 전략과 내부통제에 관한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그림 7〉 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변화



이슈5: 부동산 PF 시장 규제 강화와 영향

최근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과거 양적 성장을 지속해 온 증권사의 부동산 금융 비즈니스 모델은 구조적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이번 규제 강화의 핵심은 부동산 PF에 내재된 위험에 대한 자본 부담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순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체계가 개편되면서 사업 단계, LTV 등 실질적 위험 요인에 따라 자본 규제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과거와 같이 수익률 중심의 의사결정에 기반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던 관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제한된 자본 여력을 고려해 수익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우량 프로젝트 위주로 선별적 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관련 총 익스포저(대출, 채무보증, 지분투자 등)에 대한 한도가 도입되면서, 외형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은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PF 총당금 적립률 상향에 따른 캐리 코스트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증권사가 체감하는 수익성은 중장기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부동산 PF 시장은 단기적으로 위축 국면을 겪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와 자본 규율이 강화된 시장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단순한 외형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정교한 리스크 관리 역량과 안정적인 우량 딜 소싱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